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화”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재건축도 안되는 열악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다수 소규모아파트, 관리주체 없어 사각지대 방치... 인력·유지보수 지원 필요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방안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를 발간해 공동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 수준이 나빠지고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방 광역 도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으면서도 노후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없고 노후로 판단되는 20년 이상이 경과한 아파트 비율이 높아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다

는 것 특히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없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면 노후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건축경과 기간으로 보더라도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경과한 소규모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후됐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래 전에 건설된 아파트일수록 커뮤니티 공간 설치 비율이 낮아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책임 맡은 오병록 박사(지역개발연구부)는 취약한 관리상태에 있는 소규모아파트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구축, 관리인력 지원, 유지보수 지원 그리고 공동체활동 지원의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지원할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리 정보체계 구축, 관리인력 교육, 전문 관리인력 파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아파트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변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공동으로 관리단위를 구성하는 그룹핑·커플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비용과 대형공사 공동발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단순히 거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오병록 박사는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노후하면 많은 주민들이 노후화에 따른 영향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적 관리지원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역량 강화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120억 소요되는 글로벌 체험 학생에 역사적 패배의식 우려”

박용근 도의원 “日 귀·코무덤 역사탐방지 선정 부적절 오사카 여행시 협한 사례 많아 학생 안전 문제도 우려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위해 역사왜곡 문화유적지 지양을”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학생들의 역사 이해 증진 및 해외체험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해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기회가 아닌 학생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국외 연수 관련 예산으로 48개 사업에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관련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약 90%(전년도 예산 11억9,0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교육혁신과 및 각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경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이중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편성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경우 일본, 중국, 싱가포르, 독일, 미국,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 해외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이중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장수, 순창, 부안 교육지원청의 경우 우리나라와 역사적으로 긴밀하고 예민한 역사적 사건들이 얽여 있는 일본과 중국을 대상국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지원청이 계획지로 선정된 오사카의 경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의 수도로 삼은 지역으로 관련 유적이 많은 곳이다.

실제 모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글로벌 해외연수 계획의 경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처음 건립한 오사카성의 방문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조선 의병이나 양

민들의 귀와 코를 모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총(耳塚, 귀무덤)이 방문지로 잡혀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허허한 지역들의 경우 역사적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칫 역사적 패배의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전년대비 90%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진행되는 글로벌 해외연수와 관련해 방문 국가 및 탐방지 선정에 대해 도교육청의 신중한 선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사카 지역의 경우 여행객들 사이에서 협한(한국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혐오)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많아 어린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협한을 직접 경험할 경우 체험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대상지 선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전라도 지역의 경우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며, 특히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순창의 유령로, 왜장을 안고 만길 낭떠러지로 몸을 던진 의암 논개 등 많은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은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지원청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히데요시가 건립한 오사카 성 및 우리민족의 아픔이 서린 귀·코무덤을 방문지로 선정할 것이 적절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위식 고취를 위해 역사적 패배의식을 고취시키는 지역이나 역사왜곡 지역 등은 방문지 선정에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尹 나경원 해임에 “정권에 등 돌리는 발화점”

“사퇴하겠다는 사람 붙잡아 자기 손으로 해임... 참 잔인

국힘에 윤심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들이 넘쳐 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저출산보육지원위원회 부위원장직, 기후환경 대사직 해임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잔인한 대통령”이라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당권을 둘러싼 윤석열 정권 내분이 점입가경”이라며 “사퇴하겠다는 사람을 붙잡아 기어코 자기 손으로 해임하더니 참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 전 의원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주홍글씨를 새긴 것”이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리겠다는 독심에 할 말을 잃는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에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오직 윤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들만이 넘쳐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 국민에 대한 책임은 뒷전인 채 오직 권력만 쫓는 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오늘 보여준 비정당 정치는 국민이 정권에 등을 돌리는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시스



고향사랑기부 홍보 퍼포먼스

지난 13일 전북도청 과장급 기부 공무원들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 앞서 고향 사랑기부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부 동참을 응원했다.

백악관 “美,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

尹 자체 핵 보유 언급에 “확장억제 역량 개선, 한미 공동 추구”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확장억제의 역량 개선을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술핵 배치 및 자체 핵보유 관련 발언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배치된다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

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미국 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억제 역량의 개선”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외교·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힘에 의한 평화 기조에 기반한 대량증정·보복(KMR) 능력 구축 등을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가 심각

해진다던)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 “미국의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 및 실행하는 그런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스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캠페인